

# “나주 부영CC 한전공대 잔여 부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국회 행정위 전남도 국정감사

아파트 건설 댄 5000억원 특혜

용도변경 불승인 방안 검토해야

우후죽순 태양광발전 부작용

여성 고위간부 비율 등 도마에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성환)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개발이익 특점 기업 독점 비판이 제기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부영골프장(CC) 용도변경 특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지(40만㎡)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35만㎡)를 나주시와 전남도가 사업자 측 요청대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줄 경우, 5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져 부영주택 측에 5000억원 특혜를 안기게 된다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조과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아파트 5000여 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영록 지사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별도 국정자료에서는 “실제로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211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한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5328세대를 지으면 수익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억원 가량의 부지(2011년 매입가)를 무상 제공하고 난 이후 5000억원을 벌어들인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영의 한전공대 부지 무상기부를 둘러싸고 ‘이번 계약’ 소문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부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부영측의 계획을 일부 승인하더라도 조과개발이익이 철저히 사회에 환수되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남도에 주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기여의 뜻을 살려 공익적 목적의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부작용, 여성 고위간부 비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전국 천일염의 93%를 생산하는 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남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남의 천일염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은 전남도청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을 기용하는 ‘균형인사’

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용환 의원(대구 달서구)은 문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 협약식’과 관련해 “협약식 행사 후 전남도청 직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도한 의전을 했다”고 비

판했다.

김 지사는 “의전행사는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봉사활동을 나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영 피켓을 만들었다. 요즘 직원들은 발랄한 측면이 있다. 잘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국감 시험대’ 서는 이재명...대장동 의혹 확실히 털어낸다

대선 본선 가도 가를 기로

“청문회 대하는 자세로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후보를 겨냥한 국정감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20일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답변석에 앉는다. 정가에서는 이번 국감 성적표에 따라 출마선에 선 이 후보의 본선 가도도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 출석을 통해 본선 최대 난관인 ‘대장동 리스크’를 확실히 털고 가겠다고 버티는 분위기가. 경기도와 경선캠프 대장동 TF 등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며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국감을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불안한 후보론’을 확실히 걷어내는 동시에 대장동 이슈를 둘러싼 ‘이재명 게이트’ 프레

임을 무력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국감을 마치고 2~3일내 지지사를 내려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끝까지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보고, 대선 본선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여의도와외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거쳐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본선 승부처인 중도층 공략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20~30대 젊은 층과 여성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발표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중도층이 가장 원하는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겠다”며 “의원총회에서 후보가 강조한 공정, 성장, 민생, 개혁 등 네 가지 키워드”라고 전했다.

반대로 국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대권주자로서의 입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의 책임이 이 후보에게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후보가 특유의 ‘사이다’ 직진 본

능과 로우키 대응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을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야당의 과도한 공세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하되 ‘싸움닭’ 이미지 대신 안정감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쪽에 비중을 두려는 조연도 주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전략적인 로우키로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소수 민간부문에 과도한 이익이 몰린 점이나 유동규 전 전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변 인물의 비위가 드러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몸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감장에 ‘공격수’를 전면배치한 국민의힘의 ‘도발’에 넘어갔다가 논리 싸움에서 이기고도 여론싸움에서는 지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기관 증인 이재명을 앞세운 경기도 국감이 아니고 국민들이 여당 대선후보에 대해 실시하는 국민 인사청문회”라며 “야당 의원들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첫 통화

### “강제징용 등 외교적 해법 모색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에게 한일 간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인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와 약 30분간 통화하며 이같이 말한 뒤 “외교당국 간 협의의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밝혔다.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네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북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통화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차(3월 23일), 2차(4월 30일) 접종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가 접종을 해보니 크게 힘들지 않다. 오늘 하루 다수의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많이들 접종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전형일: 2021. 10. 1(금)

· 전형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